

한은의 '구조조정 재원확충' 선택은 무엇?

국책은행 출자나 채권 매입은 부정적 견해가 많아 코코본드 인수 방안이나 기존 통화정책 활용도 고려

‘헝거투기’ 양상을 보이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재원확충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한목소리를 내면서 실탄 마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은의 발전력까지 동원하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폴리믹스(policy mix·정책 조합)’를 통해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원칙과 법적 테두리를 여러차례 강조해온 한은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중앙은행의 역할론에 대한 재검증을 주문하고 나선 만큼 정부의 정책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책은행 출자 방안·발권력 남용 책임은 부담

먼저 구조조정 재원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가 있다. 그중 정부는 한은의 국책은행 증자를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되고 국책은행 입장에서 즉각적인 자본확충이 이루어지면 건전성 비율을 빠르게 높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이 수중에 지분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은의 수은 출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현재 한은 수은 지분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은이 수은에 9000억원을 출자한 전례가 있다.

반면 한은의 산은 출자는 산은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점에서 실행에 옮겨지기까진 힘들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산은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한은이 국책은행 출자를 단행하게 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타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남용했다는 책임을 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은의 국책은행 채권 매입·부정적 견해 많아

한은이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수은의 수출입금융채권(수은채)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거나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은의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국책은행들도 탐탁지 않은 입장이다. 현재 시장에서 산금채를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채권도 부채여서 결국 빚으로 빚을 매운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한은의 채권 매입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따라서 한은도 국책은행의 채권 매입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채권을 매입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되더라도 국책만 늘어

나게 되고 결국 국가 신인도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떠오른 ‘코코본드 발행’

산은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한은이 인수하는 방안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산업은행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코본드는 은행 자본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바뀌거나 상각되는 채권으로 국제 규정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산은은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한은 통화정책 활용 방안도 고려

한은 입장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식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우선 특별유자 방식이 거론된다. 한은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여신을 할 수 있다.

한은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 증권사와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유자를 지원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대출로 유동성을 늘려준 바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방안도 제시된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진수 기자

“수출부진 극복하려면 신흥국 수출구조 바꿔야”

한국의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3일 ‘신흥국 우리 수출 회복에 상당한 부담’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수입구조가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달러강세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의 구매력이 축소됐고 저유가 등에 따른 수출단가까지 하락했다.

과잉공급 상황이 누적돼 성장잠재력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해외투자 유입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신흥국 수출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 감소액의 66%가 신흥국으로의 수출이다. 중남미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연간 14.5%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6.7% 줄어들면서 감소폭은 확대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신흥국의 수요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흥국은 교역과 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입비중도 소비재 비중이 커졌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수입재 중 부품이나 반제품 형태의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했지만 소비재 비중이 10% 초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중간재 비중은 53%로 15.5%p 감소한 반면 식품이나 화장품 등 수입이 빠르게 늘어 20%에 근접했다.

그러나 한국은 부품 및 반제품 형태의 수출비중이 80%를 넘는 반면 소비재 비중은 10%대 초반에 불과하다.

강중구 연구원은 “소비재 중심의 수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단기기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 경제 역시 하향흐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대 신흥국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코드게이트 2016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코드게이트 2016'을 개최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앞단부에서 우승한 미국의 PPP팀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금감원 “증권사 고위험상품 부당 권유시 제재 추진”

직원 권유 없이 고객 스스로 선택할수 있도록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을 부당 권유할 경우 증권사를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2분기 내에 자본시장법에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20대 금융관련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권

유 없이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증권사가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 탓에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정형 투자자가 수익이 높은 주식형 펀드 추천을 요구할 경우, 증권사 직원은 주식형 펀드의 목록을 제시한 후 고객이 특정상품에

문의하면 이에 대해 답변해 고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확인서 역시 상품매매계약서 체결 직전 받도록 해 마지막에 투자위험을 상기시키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부당 권유할 경우 '자본시장법' 등에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민병현 금감원부원장보는 “현재 행정적인 근거가 없는데 향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민사 책임 영역이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매 프로세스를 구체화, 정형화해 투자자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선택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적절한 펀드 판매 관행과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개선에도 나선다.

인진수 기자

SK텔레콤, 이란서 IoT사업 나선다

SK텔레콤이 이란에서 원격검침 등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에너지부, 이란 석유성 산하 국영 가스공사(NIGC)와 각각 IoT 기반 사업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란 에너지부는 이란 에너지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다. NIGC는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 가스 운송·수출입 등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스 에너지·광산·조선·건설·IT 등 30개 이상 자회사를 보유한 ARSH 홀딩스와의 별도 업무 협약을 맺었다.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으로 이란에서 전력·가스·상수도 등 생활 필수 인프라 관련 통합 AMI(원격검침시스템) 서비스는 물론 빌딩에너지 효율화 사업·스마트홈 서비스 등 다양한 IoT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이란 수도 테헤란 지역 등 5000가구를 대상으로 LoRa(IoT 표준기술) 기반 스마트 가스검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NIGC와 함께 LoRa 기반 IoT망을 테헤란 지역에 구축하고 5000세대에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가스 미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LoRa 네트워크 장비, LoRa 전용 모듈이 탑재된 가스 검침기 및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현지 IoT망 운영은 이란 민영 기업인 ARSH 홀딩스가 맡는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